

코로나 감염 800만, 빈부 격차 확대,
노동계급 생계 위협, 인종차별적 폭력 조장...

확정 되기 위해 극우·파시즘 부추기는 트럼프

관련 기사 4~8면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2면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4면

미국 대선,
어찌 되고 있는가

5~6면

곰작했던
트럼프 집권 4년

7~8면

정부 책임 회피하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대책

10면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12면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김승주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도 하지만 수사도 한다.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기도 하지만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마약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 강력부, 공안·집회·노동 사건 등을 다루는 공공수사부, 고위 정치인이나 재벌 등의 대형 비리 사건을 다루는 반부패수사부가 직접 수사 부서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런 강력한 권한을 이용해 국가 권력의 핵심적 일부가 돼 특권을 누리 왔다. 경제 권력자들과 유착해 재벌 비리를 덮어 주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뇌물 사건과 성추문 사건 등 자신들의 부패도 서로서로 셀프 면죄부를 주며 덮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패한 검찰을 견제하려면 경찰을 강화하고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2019년 9월 조국 사태 직후부터 속전속결로 추진해 온 일은 부패 척결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

부패 수사만 약화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8월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을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크게 손상받지 않았다. 시행령으로 직접수사의 범위를 좀더 구체화했는데, 대부분 반부패수사부와 관련돼 있다. 공수처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약화됐지만 지휘 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을 수 있는 식이다). 결국 검찰 권한은 조금 약화된 반면,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한편, 기존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영역에 대한 권한은 공수처로 이전된다. 공수처의 권한은 막강해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발견한 즉시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빼앗아 올 수 있다.

공수처가 명목상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지금으로선 현 정부·여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한 구실을 할 공산



지독한 위선 2020년 9월 21일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검찰 개혁”은 조국 사태 직후 급물살을 탔다

이 크다(최근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동부지검이 하는 것처럼). 부패로 치면 쟁길 게 너무 많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적인 것도 그런 예상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에는 지난 반년간 직접수사 폐지와 검찰 직제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직접수사팀 침수 곳을 해체시켰다. 그중에는 라임 펀드 인사들 수사가 한창일 때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있다. 최근에 라임 펀드의 여권 대상 로비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합동으로 만든 부서로, 주로 고위층이 복잡한 금융 시장을 이용해 벌이는 범죄를 적발하려고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인력을 집중시켜 놓았다. 당시 이 수사단은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투자한 신라젠 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한다. 해체된 수사팀 중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울산지검 공공수사부도 포함됐다.

또한 추미에 휘하에서 대규모 검찰 간부급 인사가 두 번 휩쓸고 지나가자, 조국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를 하거나 정부에 불만을 표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먼 지역으로 발령 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다.

이런 인사 파동의 노골적인 효과의

하나로, 추미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운은 추미에 사단 대표 주자다)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요컨대, 문재인 표 검찰 개혁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과 달리 서민·노동자 대중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 없고 그저 정권의 부패와 위선을 감추려는 추악하고 기만적인 권력 쟁투에 불과하다.

‘민중을 패는 지팡이’ — 경찰 강화

지난 8월 정부·여당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경찰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경찰은 정권 내내 검찰과 경쟁하며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강화된 경찰 수사권을 지휘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전국적 업무를 하는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경찰 내부의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경찰의 핵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경찰은 치안(제제 수호를 위한 질서 유지)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핵심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경찰은 검찰만큼이나 부패하고 못 믿을 집단이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

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감시·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두루 알다시피 1960년 3월 김주열, 1987년 1월 박종철, 6월 이한열, 1991년 분신 정국의 강경대 등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찰은 2000년 롯데호텔 파업과 2001년 인천 부평 대우차 노동자 투쟁을 폭력 진압했고,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2005년 농민 집회에서 두 명이나 죽였다. 정보·보안 경찰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은밀한 선거 개입,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뒤통사와 탄압으로 악명 높다.

정부·여당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 준비 중인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대공수사 폐지가 아니다! 이는 이미 대공수사에서 밀접한 관계인 경찰과 국정원 사이에 인력을 ‘이동’시키고, 경찰의 임무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의 대공수사도 사찰과 고문 등으로 악명 높다. 민주항쟁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떠드는 정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박종철 열사를 죽였던 경찰의 대공수사를 강화하는 것을 ‘개혁’으로 치장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뻔했던 것은 역시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 관련 조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억압기관들의 기득권은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찰은 더 강화된 꼴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찰 개혁을 칭송하면서 정부가 검찰을 개혁했으니 이제 제대로 된 경찰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을 견제할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구는 또 누가 견제할 것인가?

자본주의 국가의 비민주적 성격, 즉 소수가 다수를 통제해야 하는 그 본질 때문에 국가의 수사·사법 기관들은 계급 중립적일 수가 없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질서”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이다. 또, 그런 국가 기구들은 모두 엄청나게 관료적인데 그 질서의 고위층에는 남의 부패를 심판할 처지가 못 되는 부패한 자들로 수두룩하다.

따라서 국가의 수사 기관이 여러 개이고, 서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싸우는 사이일지라도 그런 싸움이 진정으로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권력자들의 부패에 맞서는 유일한 힘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에서만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에 진 빛을 온갖 추잡한 위선과 불의, 개혁 염원 배신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색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김문성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루돼 있고, 정치권 로비 명단 등 내부 문건을 올해 상반기에 검찰이 확보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옵티머스 의혹

먼저 주목을 끈 것은 옵티머스 건이다. 옵티머스는 자금을 모을 때부터 안정적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서 돈을 모았다.(사모펀드는 애초에 확정 수익 보장을 제시할 수 없다.) 그 돈으로 기업 사냥을 벌이고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 펀드는 핵심 경영진이 한양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들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올해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일도 최근 드러났다.

최근에는 옵티머스 관련 내부 문건 내용이 보도되면서 권력형 게이트 여부가 화젯거리로 급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편을 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 왔다.

검찰은 더 많은 로비 대상과 로비 계획이 담긴 문건(‘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실제로 남동발전 사측과 김재현 사이에서 혐의가 진행됐던) 남동발전의 투자 유치 계획과 전 경제부총리 이현재의 연관성도 나온다. 그밖에 이재명 경기지사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보도되고 있다. 검찰이 이 문건을 검증하지 않아서 문제인데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회에서 사실이 아닌 문건이라고 단정하는 답을 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것일까?

한편, 공범 혐의로 구속돼 있는 주범인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윤석호 변호사의 처이진아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여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점도 주목 대상이다. 이 씨는 남편이 경영진으로 있는 수상한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에 공조했다. 이런 이 씨를 당시 민정수석 김조원은 검찰·금감원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로 영입한 것이다. 그것도 전임자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 논란 한복판에



서 말이다. 심지어 이 씨는 청와대 재직 기간에 옵티머스 관련 지분을 차명으로 돌려 숨긴 채 계속 보유했다.

10월 12일 국회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올해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0억 원이나 옵티머스에 투자해 고스란히 손실을 낸 사실이 거론됐다. 새롭게 알려진 것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대행사 자격으로 2.8퍼센트 이윤 약정(불법이다)을 전화로 설명했고, 하루도 안 돼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진아 변호사는 청와대 입성 직전에 농어촌공사의 사외이사였다. 이밖에도, 옵티머스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거나 투자할 뻔했던 공공기관들은 더 많다.

라임 펀드

1조 원이 넘는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실질적 대표인 김봉현(구속 중)이 금융감독원의 라임 부실 조사를 막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금 전달 자리에서 강기정이 라임 문제로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와 통화했다고도 했다. 라임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이강세(구속 중)에 대한 재판에서 김봉현이 증언한 내용이다.

이강세는 김봉현의 증언을 부인했지만, 이전과 말이 달라졌다고 한다. 강기정 접촉 전에 김봉현을 만난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와 만나서 언론 무마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강기정은 보도 직후,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고 의혹을 부

인했다. 그런데 그는 10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난해 7월 28일 자신의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강세를 만났음을 인정했다.(강기정은 광주 북구 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 광주MBC 사장 이강세와 친분이 있어 이강세가 로비스트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강세가 자신을 만나러 온 이유도 몰랐고 돈은 갖고 들어올 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기범인 김봉현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강기정의 말을 사실로 믿을 근거도 없다. 강기정의 해명은 단 며칠 만에 ‘완전한 사기·날조’와는 다른 뉘앙스로 바뀌었다. 청와대의 가방 검색은 강기정이 돈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 왜 이런 해명을 할까? 왜 처음부터 만남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라임 부실에 대한 보도가 시작된 시점이었다. 장관급인 청와대 수석이 일요일에 청와대 집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선뜻 믿기 어렵다. 청와대는 올해 7월 이강세의 출입 기록과 CCTV 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절했다. 보안을 이유로 말이다. 청와대 요직을 맡았던 인사가 재임 시절 청와대 집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데도 이를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놀랍다.

이미 금융감독원 팀장 출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김봉현에게서 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문서를 빼돌려 준 혐의로 구속돼 있다.

현재 라임 건으로 노사모 출신 부산 지역구 위원장이 구속됐고, 현역 의원 기동민은 소환 조사 대상이 됐다. 부산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도 소환 대상이다. 모두 몇 달 전 떠돌던 로비 리스트에 있던 인물들이다.

무엇보다 재판이 이제야 진행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부실이고 어디까지가 사기 행위였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들이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운다.(이미 라임의 일부 펀드는 전액 보상 확정) 마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사안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과연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들 수준에서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검찰 개혁의 효과?

이 사건들 처리에서 두드러진 것은 검찰 수사의 부실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기치로 걸고, 검찰에게 전임 우파 정부를 때쳐줌 “정권의 시녀”가 되길 요구했다. 현 여권은 윤석열이 신임 검찰총장일 때는 띄워주더니, 자신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자 태도가 돌변해 “개혁을 방해하는 구악이자 적폐인 검찰을 개혁하자”는 프레임을 내세워 그를 공격하고 있다.

검찰이 개혁 불가능한 기구라는 것은 검찰이 감히 청와대를 거스르는가 싶더니 금세 꼬리를 내리고 권력층 수사(추미애 아들 청탁 건 등)를 영터리로 한 것에서 입증됐다.

옵티머스 건은 서울중앙지검, 라임 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라임의 검사들이 지검장 이성윤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추미애의 인사 발령으로 타격을 입었던 곳이다. 첨단 금융범죄 수법에 대응하려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이 합작으로 만들어 노하위를 축적하며 운영해 온 증권범죄 수사단이 설치됐던 곳도 서울남부지검이었다. 증권사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가 이곳 관할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문구가 떠 있다. 바로 그 증권범죄수사단이 추미애의 지시로 올해 초 해산됐다. 이 수사단은 해체 당시 라임 펀드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사직한 시점과 강기정 건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 같은 시기(올해 7월)인 점이 눈에 띈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이후 강기정을 조사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펀드 사기와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검찰 직제 개혁과 인사로 타격을 받았다. 수사 내용 언론 보도를 막아서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해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부패한 자본가 정당, 민주당

박근혜는 재벌들과 특혜를 거래하며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것이 전통적인 정경유착 방식이라면, 현 정부는 금융 시장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지지자들의 뒤를 봐주며 거래를 주고 받은 모양새다.

물론 사모펀드 사기를 특별히 민주당만의 부패 양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이명박의 BBK 건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였다. 국내에 사모펀드 시장을 연 것은 노무현이었고, 규제 완화로 이를 더 활성화한 것은 5년 전 박근혜였다.

정권 실세였던 조국 부부도 사모펀드에 투자해 강남 건물주 되기를 꿈꿨었다는 점을 보면, 민주당의 핵심 인적 기반과 지향도 구 여권 세력과 마찬가지로 산업 자본가들뿐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자들임을 알 수 있다. 부패한 자본가 정당은 경제 침체 고통 전가에 더 거리낌이 없기 마련이다.

권력형 부패는 대체로 지배계급이 분열할 때 그 틈바구니 사이로 드러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권의 부패가 폭로되는 배경에는 7월부터 본격화된 문재인 지지율 하락이 있다. 권력형 부패 문제를 노동운동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의 부패 폭로가 더 큰 정치적 균열로 이어지면, 경제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 군대·경찰·사법기관을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현재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만 명칭하지는 않다.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탈세 폭로가 이 점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빚을 내고 자신의 명성을 내세우며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억만장자 라이프스타일과 지위를 지탱해 올 수 있었다. 물론 트럼프의 정교한 재정적 책략은 분명 영리한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대신 고안해 낸 것일 테지만, 그들을 고용한 건 트럼프다.

트럼프는 앤서니 트롤롭의 소설 《지금 우리가 사는 법》에 나오는 금융가 멜모트를 닮았는데, 소설에서 멜모트의 막대한 재산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는 멜모트가 자살로 내몰린 것처럼 이미 몰락했을 수도 있다.

둘째, 트럼프는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미국에서 파시즘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는 미국 억만강자들에게서 오랫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종류의 극우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기에는 자신의 개인적 지위와 부에 너무나 집착한다. 그리고 거대 자본은 미국의 허약한 노동조합들을 분쇄하는 데 파시즘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민주당 조 바이든과의 대선 경쟁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계속 머무려면 주로 소도시에 사는 자신의 백인 지지자들이 투표하도록 고무하는 동시에, 민주당원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후자에는 특히 가난한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율을 낮추려고 공화당 주 의회들이 고안한 반쯤 합법적인 조치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위협에도 의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짓밟으려 동원했던 호전적인 무장 극우 폭력배들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보름 전 대선 토론회에서 이러한 폭력배들 중 하나인 ‘프라우드 보이즈’에게 “몰려서서 대기하라”며 어필하려 한 것이다.

그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11월 3일 선거일이다.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지키기 작전을 위한 군대에 모든 신체 건강한 남녀가 자원”하라고 촉구했다. 극우 민병대가 투표소에 대거 몰려나와 바이든 투표자들에게 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곤경

셋째, 트럼프는 곤경에 처해 있다. 그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그에게 재앙이지만, 우연은 아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공화당 고위인사들을 휩쓸고 있다. 그들은 3주 전 트럼프가 우파 가톨릭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을 축하하려고 백악관에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뽀뽀이 모여 앉았다.

미국 정부의 수석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는 이를 “슈퍼 전파 행사”로 규정했다.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잘못 대응한 것만으로도 바이든과의 경쟁에서 큰 타격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이 확진자가 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회의론과 음모론을 부추겨 왔다.

따라서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우스꽝스럽게도 마스크를 벗는 세리머니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동원하고 상대방은 공포에 떨도록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하지만 트럼프가 어리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한 탓에 그는 이미 많은 타격을 입었고, 특히 나이트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렇다. 미치 매킨넬 상원 원내대표(78세)와 같은 공화당 내 측근조차 몇 달 동안 백악관에 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백악관 측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양성 반응인 듯 보이는데도 대선 캠페인을 재개함으로써, 트럼프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미 바이든은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인 플로리다의 65세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 1퍼센트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들은 2016년에 트럼프가 17퍼센트포인트 앞섰던 집단이다.

현재 많은 논평가들이 트럼프가 패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영향력이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패배하더라도 그는 끔찍한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는 극우파에게 이전에는 부족했던 자신감, 인지도, 전국적 관점을 부여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들에게 맞설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6호 / 번역 김동욱

미국 대선, 어찌 되고 있는가

— 트럼프 재선? 선거 불복?

김준호

트럼프가 과연 재선할 수 있을까? 지난 4년 동안 온갖 거짓말과 오물을 쏟아내고,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올려대고,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을 사지로 내몬 이 자가 낙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치 않다. 지금 미국 공식 정치는 1974년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직을 중도 사퇴하게 한 ‘워터게이트’ 추문 이후 약 반 세기 만의 최대 위기다.

현직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선거 불복을 말하고, 우편 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할 듯하자 미국 우정청(USPS)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을 거부했다. 여러 주들에서 사전 투표소가 폐쇄됐고, 플로리다주(州)에서는 과태료 미납 등 사

소한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의 투표권이 박탈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트럼프 반대자들을 겁박하는 일도 거듭 벌어지고 있다.

10월 8일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무장 조직이 대선 전에 주지사 납치와 “내전”을 모의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올버런 와치맨’이라는 이 단체는, 미시간주 주지사 관저를 습격해 주지사를 공개 처형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다른 음모들도 더 있을 것이다.) 주도자 몇몇은 지난 4월 말 방역 완화와 경제 재가동을 요구하며 주의회를 무장 점거한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납치 대상인 주지사 탓을 했다!

이런 쟁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자본가계급의 선호 후

보였던 적이 없다(대자본가들이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반기긴 했지만 말이다).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 주류 사이에는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우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둘러싼 전략적 이견이 있다. 일례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대통령인데, 그 사유가 러시아와의 관계(대외 정책)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근본에서 보면, 이런 정치 위기의 배경에는 중첩된 위기가 낳은 **정치 양극화** 문제가 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극우가, 다른 편에서는 저항이 부상한다. 현재 미국은 이런 정치 양극화의 최전선이고, 바로 이 점이 상황을 근본에서 규정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사회의 면모들을 살펴야 한다.

2020년 미국: 두려움과 희망

2020년 미국의 모습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지옥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팬데믹이 있다. 트럼프는 2월 초에 코로나의 위험을 알고도 이를 두 달 가까이 은폐하고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22만 명, 누적 확진자는 8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트럼프가 대중의 생명보다 이윤을 철저히 우선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재계 지배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걱정했고, 초기부터 경제 재가동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이를 모질게 밀어붙였다. 방역 조치를 모조리 무시하고 경제를 재가동하라고 압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전염병 대응 기관들을 체

계적으로 약화시켰다. 동시에 코로나19가 허구라는 음모론을 부추기고, “중국산 독감” 운운하며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중국 때리기 수위를 높였으며, 방역 완화를 촉구하는 무장 시위를 고무했다.

팬데믹 위기는 경제 위기와 중첩됐다. 미국 경제는 2007~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또 다른 추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2.9퍼센트 하락했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가장 큰 폭의 위축”(《가디언》)이다.

노동자·서민·유색인종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막대한 의료비를 청구받거나 사망했

다.(트럼프의 개악 탓에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이 전보다 더 늘었다.) 용케 전염병을 피해도 생계가 위협받았다. 수천만 명이 실업 지원금에 의존해 살고,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반면 억만장자 643명의 자산은 6개월 만에 약 1000조 원 늘었다.

또, 여러 기후 재앙이 미국 곳곳을 강타했다. 가장 종말적인 이미지는 미국 서부에서 펼쳐졌다. 들불이 12개 주(州)에 번져 서울 면적의 30배 가까이 불탔다. 기후 변화 부정론자인 트럼프는 “날씨가 추워지면 제풀에 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은 지금도 불은 계속 타고 있다.

참혹한 인종차별도 있다. 인종차별

은 노동계급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줬지만, 단연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경찰 폭력일 것이다.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조지 플로이드, 자기 차에 타려다 등에 총을 7발 맞은 제이컵 블레이크, 경찰이 총을 수십 발 쏘서 자다가 비명횡사한 브리오나 테일러 등.

저항

하지만 지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 저항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운동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는데, 첫 3개월 동안 1만 건이 훌쩍 넘는 시위·행진·소요·쟁의가 벌어졌다. 미국인 약 40퍼센트가 한 번 이상 여기에 참가했다. 무엇보다 이 운

동은 대중 자신이 행동해야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대중에게 일깨웠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바꿨다. 미국 사회주의자 에릭 프레츠는 이 운동 덕에 “사상 최초로 미국인 4분의 3 이상이 인종차별을 **체제**의 문제라고 여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운동은 이전까지는 비현실적이라 여겨졌던 여러 요구들을 쟁점화하기도 했다.

이런 저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 차별, 성소수자 혐오, 이민자 천대, 강경 우익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들이 분출했고, 노동자들도 조금씩 투쟁에 나섰다. 그 수혜로 ‘민주적 사회주의’가 미국 공식 정치에 입성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항쟁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정치 양극화를 오른쪽에서 부추긴다

이런 상황의 근저에는 십수 년째 계속되는 경제 위기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포함해, 미국과 세계 곳곳의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기성 체제는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주변화돼 있던 강경 우익 정치인들이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정치가 첨예하게 양극화됐다.

트럼프는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다. 애초에 트럼프는 인종차별과 경제적 국수주의를 부추겨서 당선됐고, 미국 사회의 가장 반동적 부위

를 자기 주변으로 결집시켰다. 임기 내내 트럼프는 그런 반동을 고무해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공격했으며,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렸다.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 대응 실패와 경제 추락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이 한창일 때부터 방역 완화를 촉구하는 무장 시위를 고무했고, 자신의 실패가 모조리 “세계주의자들”, “미디어” 등이 속한 지배자들의 비밀스런 카르텔 탓이라고 떠들었다.(하지만 그런 ‘아웃사 이더’ 자처의 효과는 이전만 못하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응해 트럼프는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는데, 이는 대중 저항을 공격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전통적 구호였다. 인종차별을 이용하고 대중 저항을 적대하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이 대개 공유하는 태도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트럼프가 다른 지배자들과 다른 점은 의식적으로 **극우**를 고무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극우를 “진정한 애국자”로 추켜세우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정당한 응징”을 가하라고 부추겼다. 그런

▶ 6면으로 이어짐

트럼프의 전략이 끔찍한 오물을 남기고 있다 나치식 경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 5면에서 이어짐

언행은 극우를 복돋우는 양분이 됐고, 특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일체를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이 자라날 토양을 일궜다.(관련 기사 본지 338호 ‘극우 운동 부추기며 판돈 키우는 트럼프’)

트럼프 자신은 파시스트가 아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공식 정치를 더 우경화시키는 것이지만, 의회민주주의(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당면 목표는 선거로 재집권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거판을 지지분하게 만들어 대중의 환멸을 불러 일으키는 과정에서, 온갖 강경 우익과 극우가 고무받고 있다.

이것이 낳는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의 재선 운동을 사다리 삼아 극우가 전

통적 공화당 우파(미국 지배계급 주류의 일부)와 관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극우가 정치 무대 중앙으로 부상하고, 지배계급 정당인 공화당의 지지층이 더 오른쪽으로 확장되며, 민주당 등에 대한 우경화 압력이 커지는 등 **정치 전반의 우경화가 촉진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파는 시궁창이 진정한 파시즘의 토양이 될 수 있음을 가버이 여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를 통해 파시스트들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점점 극단으로 내몰리는 중간계급들과, 지배계급의 일부에게도 매력을 줄 수 있게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파편화돼 있던 극우 파시스트들에게 “이전에는 부족했던 자신감, 인지도, 전국적 관심을 부여”하며 이들의 부상을 돕고 있다.

바이든: 주류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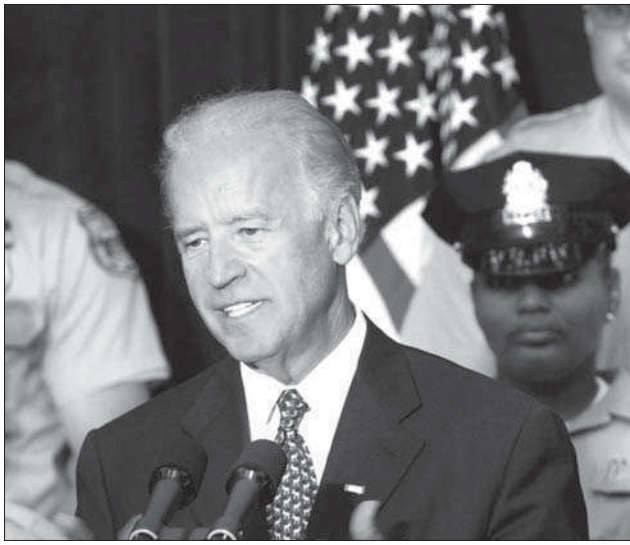
미국의 주류 정당들은 트럼프를 제아하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이는 트럼프를 축으로 돌아가는 반동적 벨트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트럼프와 경합하는 조 바이든은 반(反)트럼프 정서에 기대려 한다. 구체적인 것은 거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트럼프가 아님을 열심히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가 제풀에 무너지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자신의 친기업 성향을 숨기려 들지도 않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정치 인생 내내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요구에 반대해 왔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해 우파에 호의적 눈짓을 보낸 셈이다.

바이든은 이런 전략으로 “중도표”를 잡으려는 듯하지만, 오히려 반(反)트럼프 표심과는 거리를 벌릴 뿐이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트럼프를 앞서지만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바이든의 선거 전략은 큰 틀에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취한 전략의 재판이다. ‘트럼프만 없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민주당에 투표하라.’ 그러나 클린턴과 바이든이 대변하는 ‘정상’은 앞서 묘사한 지옥을 만든 바로 그 지배계급의 ‘정상’이다.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이 패배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때도 여론 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트럼프를 앞질렀는데, 심지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는 그때보다 훨씬 작다. 바이든이 클린턴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선거 정치에 감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저항과 혁명적 정치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당선해도 체제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법질서 확립” 운동하며 변화 염원(아래)과 거리 두는 민주당 조 바이든(왼쪽 위),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위)

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 주류가 지난 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중사회주의’ 운동의 사실상 지도자인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을 “친서민” 후보로 포장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에 바이든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2016년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의 염원과 행동을 친기업 전사의 투표 부대 수준으로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 이는 당시 변화를 바라던

대중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자아냈다. 샌더스의 행보는 트럼프 당선을 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저항 운동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2004년 미국 대선이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는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져 정치를 뒤흔들던 때였다.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지지율은 역대 최악 수준이었다. 그런데 부시와 경합한 민주당 존 케리

는 자신이 부시보다 전쟁을 더 잘 치를 수 있다고 나섰고, 대중의 실망을 사 큰 표차로 낙선했다.

당시 적잖은 미국의 반전 운동가들이 (지금 샌더스 등 운동 일각이 그러듯) “부시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반전 운동 건설보다 케리 선거 운동을 우선시했다. 운동은 케리 지지를 두고 분열했고, 케리가 낙선했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부시는 손쉽게 재선해 이라크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선거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과제

지금은 위기가 2004년보다 훨씬 첨예하다. 각각의 위기가 서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팬데믹 위기가 경제 위기를 더 한층 부추기고, 경제 위기에 대응해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을 휘두른다. 이윤 물이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중첩되면서 정치 위기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무엇이든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위기의 고통이 노동 대중에 떠넘겨지고, 그 와중에 반동적 우익이 자라는 것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복잡한 선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두 후보 간 지지율차는 좁혀졌다 벌어졌다를 거듭하고 있는데, 설령 바이든이 득표를 더 많이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할 수 있다.(미국 역사에서 다섯 번이나 그랬다.)

비교적 가능성 높은 상황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도 결정적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패배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결과가 어떻게 심각한 쟁투가 뒤이을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등을 이용해 쟁투를 벌일 뿐 아니라, 극우 지지자들의

거리 행동을 부추겨 상황을 반전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려 들 수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는 이미 무장돼 있고, 거리에서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선거 결과를 두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반면, 트럼프가 마지못해 패배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퇴임한 후에도, 지배계급 정당 공화당의 핵심부와 극우를 잇는 사다리 노릇을 계속한다면, 정치 전체의 우경화를 계속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가 떠난 자리에 제2, 제3의 트럼프가 등장할 수도 있다.

쟁투

바이든이 당선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적잖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낙선에 보일 첫 반응은 안도감일 것이다.(물론 트럼프의 패배는 즐거워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 지배자들을 대변하고, 체제 위기에 대처하며 (오바마가 그랬듯) 인종차별과 노동계급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대

변하는 지배자들도 (위기에서 기회를 얻는 극우만뿐이나)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의 적이다. 게다가 앞서 봤듯, 바이든이 펼칠 바로 그런 공격은 극우가 성장할 기회를 열어 준다.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모두에서 중도 정부에 대한 환멸에 힘입어 극우가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재느라 부심인 듯하다. 심지어 일부는 트럼프가 재선해야 한반도에 깜짝 선물이 떨어지리라 여기는 듯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때리기였다는 것을 봐야 한다. 트럼프는 경제적 국수주의 이데올로기로 중국 때리기를 뒷받침했고,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미국 지배계급 주류 대부분이 합의하는 바다. 바이든도 자신이 트럼프보다 더 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하는 까닭이다.(사실 대중국 압박 강화는 바이든

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근본에서, 한반도 긴장은 제국주의 경쟁 심화라는 체제의 근본적 특성에 좌우되는 일이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달린 일이 아니다.

진정한 도전

그러면 진정한 도전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강력한 대중 저항이 트럼프·바이든 모두가 대변하는 체제의 패악에 맞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여름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지배자들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고 정국을 주도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지금도 이 운동은 극우 반대 운동,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데 맞서는 노동 대중의 운동들을 고무하고 있다. 일례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기점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비공인 파업이 속출했다.

물론 과제도 있다. 이 운동은 인종차별과 우익에 맞서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을 단결시키고, 체제의 온갖 병폐에 맞선 저항을 **일관되게** 고무하는 방향으로 심화돼야 한다.

그런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정치적 경험이 짧은 운동일수록 더욱 그렇다.) 끈질기게 투쟁을 고무·건설하고, 승리의 전략을 제시하며, 노동계급이 힘을 극대화하도록 조직하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논리에 매몰돼 민주당의 당락에 연연해서는 그런 일을 일관되게 할 수 없다. 미국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퍼의 지적처럼, “선택지가 자본가 정치인들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제한된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패배가 온다.”

급진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명적** 정치와 조직의 중요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혁명적 정치와 조직을 건설하는 과제는 험난하지만 중요한 과제였다. 지금 그 과제는 이전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고,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며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교훈 중 하나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12일 주최한 공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꿈직했던 트럼프 집권 4년

이사벨 린로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꿈 직한 일들로 가득 찼지만 그에 맞선 저항도 만만찮았다. 그의 인종차별, 성 차별, 성소수자 혐오, 무슬림 혐오, 편견에 찌든 언사는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극우의 부상, 핵전쟁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탓에 미국의 빈부 격차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크게 벌어졌다.

또, 트럼프는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한 추정을 보면 그는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1만 9127개의 거짓말과 사실을 곡해하는 말을 했다.

2016년 대선 유세 기간에 트럼프는 많은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늘어놓았다. 가령, 워싱턴 정치가의 부패를 청산해 “오물을 청소”하겠다고 했다.

그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와 그가 언론을 ‘가짜 뉴스’라 매도하며 악마화하는 것은 현재 그의 우파 지지자들의 슬로건이 됐다.

인종차별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유세에서 핵심이다.

2020년 대선의 첫 TV 토론회에서 그는 파시즘 조직인 ‘프라우드 보이즈’에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했다.

또, 그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종차별과 일부 국가기구를 동원할 거라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대선의 재현이 될 수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는 앨 고어의 승리를 빼앗았는데 트럼프의 경우 그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

자신감

트럼프는 미국 극우들에 자신감을 주고, 사회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정당화한다.

2017년 샬러츠빌에서 [극우 집회에 참가한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반파시즘 시위대를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트럼프는 “양쪽 모두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 인종차별적 대오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네오나치로 구성됐는데도 말이다.

2019년 그는 모두 흑인 여성인 민주



야만과 저항 트럼프의 정책은 잔인하고 꿈직했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따랐다

당 의원들 4명을 향해 그들의 “출신 국가”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그의 인종차별적 언사는 백인 극우주의 혐오 단체들이 55퍼센트나 성장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실업률은 오르고 부자들 세금은 내리다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 1월 이래로 그는 미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잘 나가고 있다며 250번이나 거짓된 언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2017년 1월과 2020년 8월 사이에 실업률은 4.7퍼센트에서 8.4퍼센트로 올랐고, 2020년 4월에는

14.7퍼센트에 달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15조 달러에서 21조 달러로 올랐다. 당초 트럼프가 국가 채무를 8년 내에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말이다.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은 부자들이다.트럼프가 2017년에 ‘감세와

일자리 법’에 서명하면서, 법인세는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줄었다.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납세자 중 상위 1퍼센트(연 소득 73만 2800달러 [8억 4000만 원] 이상)는 2027년까지 그 법으로 인한 전체 감세 혜택의 83퍼센트를 챙긴다.

코로나 부인한 대가를 치르는 트럼프

트럼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결과, 미국에서 20만 7000명 이상 사망했고, 73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트럼프 자신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까지도 거짓말을 했다. “팬데믹 종식이 눈앞에 있고, 내년은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 재가동을 위해 이동 제한령을 끝내려고 밀어붙이기 위해 팬데믹의 심각성을 앞잡아 봤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표백제를 주사로 맞으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대응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하나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는 민주당 주지사들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난해 왔다.

트럼프는 ‘적정 부담 보험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하고 대체해 버리겠다고 거듭 버려 왔다.

버락 오바마가 도입한 이 법으로 2400만 명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트럼프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오바마케어 중 개인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부분을 없앴는데, 이는 시민들

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10퍼센트 인상됐다.

비록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뒤엎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위협한 대로 “오바마케어가 실패하게끔” 실질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더 우파적인 연방대법관들이 그 법을 전면 폐지하기를 바란다.

그의 공격으로 지금 미국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700만 명이 넘는 다. 반면 보험회사들은 주머니 두둑하게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의 끝없는 공격은 그의 임기 내내 지속됐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인종차별주의자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만 8000명 아래로 제한하겠다는 2016년 선거공약을 인정사정없이 고수했다.

그리고 임기 첫 주에 무슬림 혐오적

인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했고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시민들의 미국 여행을 90일 동안 막았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54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냈다. 아이들은 이민자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돼 철창

에 갇혀야 했다.

이민자들은 장기간 구금, 과밀한 환경, 열악한 위생 기준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는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1000마일(약 3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콘크리트 벽을 미국-멕시코 국경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9월까지 341마일의 벽이 완성됐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장벽

은 10마일이 채 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멕시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장벽 프로젝트의 재원은 미국 국고에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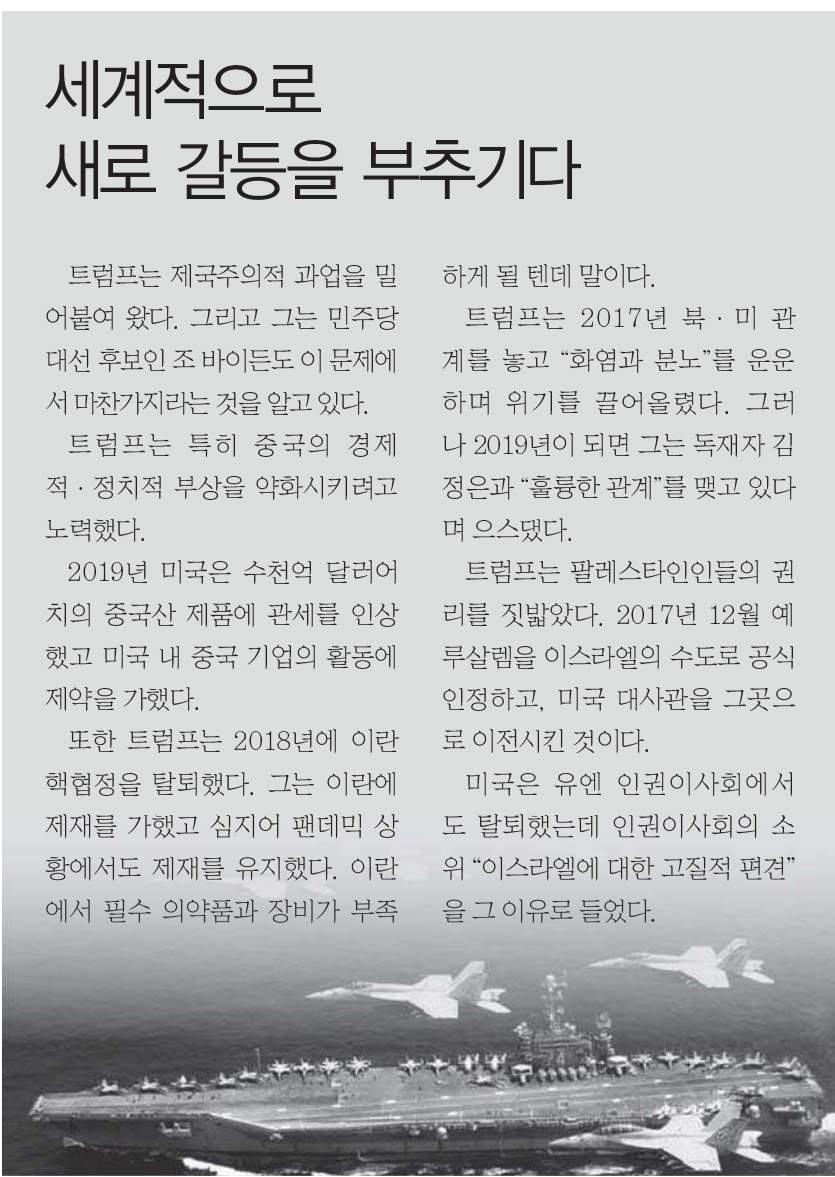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 아래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수많은 경찰력을 파견했고, 이민자에 대한 직접 발포까지 운운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정책들은 저항에 부딪혀 왔다.

2017년, [트럼프의 이민자 탄압 정책에 맞서는] “이민자 없는 날” 집회는 사람들에게 출근 거부와 등교 거부, 불매를 호소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는 [무슬림 국가] 입국 금지 명령에 항의하러 수많은 시위대들이 나섰다.

▶ 8면으로 이어짐



트럼프와 사영화된 의료로 위험에 노출된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최악이다. 심지어 최근 트럼프마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감염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 하기도 전에 백악관에 복귀해 선거 운동을 재개했다. 고장난 체제가 어떻게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사라 베이츠**가 살펴본다. 이 기사는 9월 27일에 쓰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2월 26일에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차차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당시 미국의 확진자 수는 한 줌[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후 최소 20만 5000명이 사망했고 690만 명 넘게 확진됐다.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음을 이보다 더 잘 반증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 대비 4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팬데믹을 경시하는 데 여념이 없는 우파 정부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기회를 모두 놓쳤다.

비영리 기구인 파트너스인헬스의 CEO 실라 데이비스는 정부의 접근법을 이렇게 묘사했다. “병원을 준비시키고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라.”

“특히 초기에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보다는 입원이 필요한 20퍼센트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전부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보건 노동자들은 개인보호장구를 확보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21 회원인 손 커밍스의 말이다. “차가 없으면 검사를 받기 위해 3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합니다.”

“부자들은 검사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계급입니다. 버스 운전자, 우편 노동자, 보건 노동자 등 말입니다.”

민영화된 의료 체계로 인해 지금까지 매년 수백만 명이 죽음에 내몰리고 반면에 제약 회사와 비대환 [의료용품] 공급자들은 이윤을 벌여 왔는데, 이 의료 체계는 팬데믹으로 완전히 박살났다.

대형 마트의 선반들을 텅 비게 만든 적시 조달 방식은 의료용품 상점 찬장에 마스크와 장갑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



사진 출처 New York National Guard

“부자들은 검사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허술한 계획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국가전략비축 의료물자에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1억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확인했다. 2009년 신종 플루 때 소모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들을 보충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보통 고용과 연동된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불한다. 현재 2600만 명이 실업 수당을 청구한 상황에서, 전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만 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그조차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병원비에 맞닥뜨린다. 62일 동안 입원한 70세 코로나 환자 마이클 플로는 110만 달러(한화 12억 5000만 원)가 넘는 치료비를 청구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남은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인가? 내가 무얼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치료비를 보면 살아 있다는 죄책감이 확실히 더 커집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사회 변화를 원치 않는다

미국 21개 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매일 약 4만 명이 새롭게 확진되고 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완전히 선거 모드가 돼서는 9월 넷째 주에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주 잘해 왔다.”

전적으로 트럼프 탓은 아니더라도 그의 무대응은 높은 사망률과 광범한 고통을 야기하는 데서 핵심적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가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별로 놀랍지는 않다.

2018년에 트럼프는 국가의 팬데믹 대응 조직을 해체했다.

그는 미국이 이전까지 앞섰던 그 어떤 이점도 날려 버렸고,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생산해서 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늘릴 일체의 노력을 거부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우파적 지지기반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연출 행위였다.

트럼프는 그 이후 과학을 경멸하는 발

언을 쏟아냈고,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외출제한령을 해제하라는 요구에 힘을 싣고, 전국적 수준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제기하는 비판은 별로 매가리가 없다.

바이든은 때때로 트럼프의 “거짓말과 무능”을 비난하지만, 위기에 대응할 방법은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둘 다 고장 난 체제에 진정으로 도전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 의향도 없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

은 체제에 도전할 수 있다. 베스 레드버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적응하는지 연구해 온 사회학자다.

그는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만사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큰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는 정상적이고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코로나 대응]에서 기관들이 이토록 실패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실패들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것은 누구인가?”

독감 시즌: 옆친 데 덮친 격

미국의 보건 노동자들은 겨울 독감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독감으로 50만 명이 추가로 입원해야 할 수 있다.

“두 팬데믹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계절독감)만 백신이 갖춰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백신 안전 연구소 소장인 대니얼 새먼의 말이다.

“[백신 접종이 안겨 줄] 지역사회 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독감은 비상사태로 다했야 마땅하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미국의 보건 노동자들은 곧 이중의 위기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개인보호장구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진

개인보호장구 [사용] 지침은 과학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지속적인 물량 부족 상황에 근거한다.

지난 3월 연방 관료들은 보건 노동자들에게 N95 마스크 대신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수술용 종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물량이 부족한 탓에 일부 병원 관리자들은 N95 마스크 사용을 통제한다. 그래서 보건 노동자들은 비상 상황에서 N95 마스크를 구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보건 노동자의 무려 58퍼센트가 개인보호장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유한 병원들은 개인보호장구 공급 가격 인상에 잘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다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병원들은 마스크와 돈이 부족하다.

이는 극명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 7월 초를 기준으로 흑인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은 백인의 두 배 이상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4호 / 번역 오선희

▶ 7면에서 이어짐

낙태권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다

트럼프는 그의 여성혐오를 애써 숨기려 하지 않는다. 최소 26명의 여성이 트럼프를 성 관련 위법행위로 고소했다.

그는 확고한 낙태 반대론자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 계획 시설들에 주어지는 공적 지원금을 제약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의료인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낙태 시술 정보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거나 낙태시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운동을 주관했다. 이 판결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를 일부 허용한 판결이다. 트럼프 탓에 몇몇 주에서는 낙태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약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 법안”, 각종 규제, 낙태클리닉 폐쇄, 치솟는 의료비는 모두 가난한 여성들이 임신·출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그의 반낙태 법안들은 여성들의 낙태를 막지 못한다. 결국 가난한 여성들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시술에 기대게 된다.

트럼프 집권에 맞서는 저항의 포문을 연 것은 2017년 1월에 열린 여성 행진이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시위였다.

총 500만 명 이상이 행진했고 워싱턴DC에서는 4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건강보험 개혁, 임신·출산의 권리, 성소수자 권리를 요구했다.

기후 위기를 가속시키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그는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해 석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 태양광 패널에는 3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태양광 발전 비용을 높이고 일자리를 줄였다. 태양광 발전 산업은 석탄 산업보다 거의 4배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2016년에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2020년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은 340만 에이커[서울 면적의 23배] 이상을 불태웠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아닌 산림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트럼프는 아래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취임 100일째가 되던 날, 미국 전역 300곳에서 기후대중행진이 열렸다.

그리고 2019년 9월 기후 파업 기간 동안에는 50개 주에 걸쳐 1000건 이상의 파업이 일어났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5호

번역 유나연·강미령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10월 7일 그리스 법원이 황금새벽당에 내린 판결은 세계 도처의 파시스트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사라지게 생겼고, 나치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이 타격을 입었다.

5년 반의 재판 끝에 법원은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 바깥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큰 시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시위는 나치를 고립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 정부에게도 엄청난 압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파인 신민주당 정부는 이 판결을 자신들이 주도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지난번 신민주당이 집권 중이던 2013년에 반(反)파시스트 래퍼인 파블로스 파사스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신민주당이 언제나 나치에 반대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기회주의적인 태도 변화다.



10월 7일 법원 앞 집회와 행진 '인종차별과 파시스트의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KEERFA)은 파시즘을 패퇴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수십 년 동안 신민주당은 극우의 피난처 구실을 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도, 1974년 군사정권이 붕괴됐을 때도 극우들은 신민주당을 피난처로 삼았다. 그런 우파 정당이 지금 “반나치 세력”을 자처해야 한다는 것은 신민주당의 굴욕스런 처지를 보여 준다.

황금새벽당은 원조 나치를 본보기로 삼았다. 이들은 의회 노선을 시도했지만 초기부터 돌격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황금새벽당은 여러 차례 이주민과 좌파 인사들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항상 처벌을 모면할 수

있었다.

공동전선

그들을 경찰에 맡기거나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다.

법정에서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기까지 20년이 걸렸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파시스트들의 빈번한 폭력적인 공격에 대응해 무엇보다도 반(反)파시스트 운동이 성장한 데에 있다.

이런 운동이 성장한 또 다른 요인은 2009년 이후 극우의 위협이 커진 데에 있다.

처음에는 극우 정당인 라오스(LAOS)가 의회에 진출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터지자 라오스는 연립 정부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라오스당의 성공에 힘입어 2012년에는 황금새벽당이 의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응해 반(反)파시스트 운동의 활동 수위가 높아졌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인 ‘인종차별과 파시스트의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KEERFA)을 구성한 것이 매우 중요한 전진이었다.

우리는 나치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 준 영국의 반나치동맹(ANL)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우파 정부의 난민 정책은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며, 극우를 고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난민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성공을 더 쌓아 올려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6호 / 번역 김지혜



서평 |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현재 결정이 “진보”인 것은 맞지만,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현재 결정이 전제한 “태아 생명권” 논리의 내재적 불합리성을 밝히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

이런 점은 많은 진보적 여성·노동단체들이 현재 결정의 긍정적 요소를 과대 포장하고 경계를 늦추는 문제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자 연대>도 현재 판결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박이대승, 오월의봄, 136쪽, 11,000원

직후 현재 결정의 일정한 진보성뿐 아니라, 그 한계와 공백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자는 “생명”과 “생명권”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현재 결정의 오류를 명쾌하게 짚어낸다.

“동물과 식물은 모두 살아 있지만,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듯 태아가 살아 있다고 “생명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은 타인을 “살인하면 안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한국의 법체계에서 태아는 비인간이다. 현재 결정문에도 태아를 “형성중인 생명”,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생명 등으로 묘사할 뿐, 인간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한다.

인간

따라서 비인간인 태아에 “생명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만약 태아를 “생명권”을 가진 인간으로 규정하면,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은 “살인 허용”법이 된다.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든가, 태아를 비인간으로 인정하고 “생명권

개념을 포기하든가 말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조화” 따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태아 생명권” 논리는 “인간 여성과 비인간 태아의 법적 지위를 뒤집”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꼼수”일 뿐이라는 저자의 지적도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 ‘로 대 웨이드’ 판결이나 현재 판결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주장이 그 예다. 특히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획득하는 시점”은 낙태 규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여성의 권익보다 “태아 보호”가 더 큰 가치를 보유한 시점이나, 낙태권을 박탈해도 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특정 시점이 타당하다고 할 “필연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라별로 낙태 허용 기간이 다 다르고,

낙태 금지 기간 설정 자체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간과 사유에 따른 낙태 부분 허용안은 또 다른 규제일 뿐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임신 유지와 중단에 대해 판단하고 개인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오롯이 임신한 여성 자신의 내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여성의 동의 없이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국가도 개인적 결정의 사유를 요구할 수 없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리적·헌법적 측면에서만 “태아 생명권” 문제를 다룬 것은 충분하지 않은 반론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권”을 배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를 제공한다. 일독을 권한다.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이정원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필수노동자들은 상당한 감염 위험 속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그동안 이런 업무에 종사해 온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산업재해 위험도 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여서 노동법이나 산재·고용보험 등의 보호에서도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과 노동조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재해(감염)·과로·실업 등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내놓은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데다 핵심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선, 노동조건 개선 대책에 알맹이가 없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물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집중 관리를



포장만 번지르르한 정부의 부실 대책 세트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가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집단 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정부의 과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 최소한의 조건조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사용자들에게 조건 개선을 강제하기는 무방한 일이다.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올해 9월부터 557명의 간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한국의 간호인력이 인구 1000명당

4.12명으로 OECD 평균인 7.5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현실인데도 말이다.

돌봄이나 환경미화처럼 정부가 직접 노동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도 미흡하기만 하다. 이런 사회서비스 업무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작 근로감독을 실시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전부터 환경미화, 콜센터, 요양·돌봄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가 계속돼 왔지만,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추진을 통해 요양·간병 등 돌봄 서비스 일부를 지

자체들이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윤 중심의 민간업자에게 내맡겨 온 정책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전체 돌봄 노동자의 5.7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조차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극히 협소하다.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는커녕 내년 상반기에나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등 필수노동자들 상당수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산업 재해를 겪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 정부 임기 동안 획기적인 산

재보험 가입 확대는 요원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내놓았지만, 정부 개정안 자체가 특고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는 데다 이조차 사용자들이 반발하자 벌써부터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형편없는 누더기가 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은 거창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기존에 내놓았던 부실한 대책들을 세트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추가로 투입할 예산 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말로만 생색내기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배달 플랫폼 업종의 노동계, 기업, 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다.

노동계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참가하고 있고, 기업측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가하고 있다.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포럼 위원장을 맡았다.

플랫폼 포럼은 이번에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

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플랫폼 노동자 권익을 명시한 첫 노사 협약”이라고 반겼다.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박흥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해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 언론인 〈민중의 소리〉도 “이번 합의의 핵심은 배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점, 배달 노동자의 고용주를 사용자로 인정한 점”이라며 의의를 부각했다.

물론, 협약문에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협약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이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다.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내용도 매우 불충분하거나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지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기업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음식배달 서비스 결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퍼센트나 늘었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회피해 온 것도 급속한 수익 증대의 비결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반면 배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벌충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 신속 배달 압박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7일 성남시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음식배달 라이더는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위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임준형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장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선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13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216만 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우리 노조 조합원 중 한 50대 강사는 지난해 어깨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여전히 몸이 성치 않다. 그런데도 생활고 때문에 몇 달 전부터 폐업한 가게를 철거하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정부는 방과후강사를 포함해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월 50만 원씩 4개월치). 그러나 이는 2019년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 224만 원(최저임금위원회)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에 이조차 받지 못하는 강사들도 있다. 우리 노조가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8명 중 약 19퍼센트가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예컨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한두 학교 방과후 수업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강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뚫는다. 그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 수입원(방과후 수업)에서 소득이 없어 생활고가 심해졌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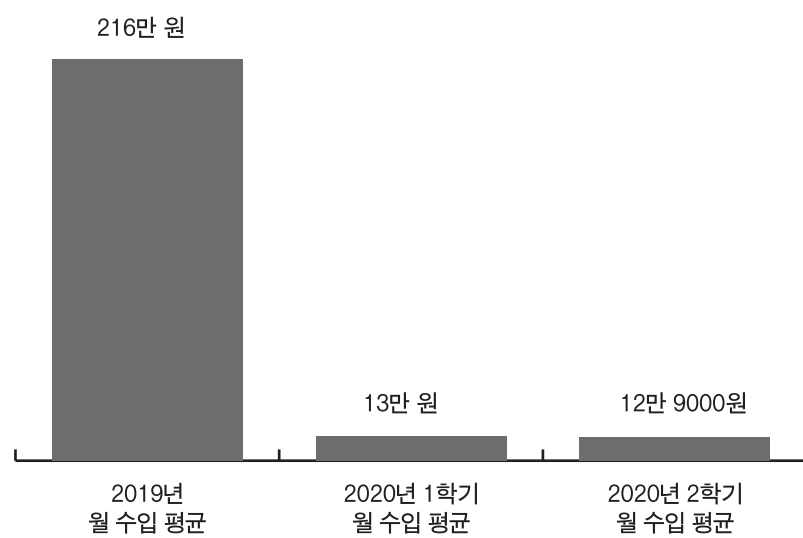


올해 7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강사가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려다 보니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거나 개인적인 사유(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등)로 지난해 수업을 쉬다가 올해 다시 수업을 시작하려던 강사들이 제외됐다.

정부는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

겠다고 했지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강사들은 또 제외됐다. 올해 6·7월과 비교해 8·9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소득이 없었던 방과후강사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



자료: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제외되는 여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내년에 방과후수업이 재개될지도 미지수다. 강사들은 재개되더라도 고용이 유지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강사들은 짧게는 3개월, 길어도 1년 짜리 계약을 맺는다. 규정에 따르면 학년도가 바뀌면 강사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반드시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 강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교들은 이를 이유로 공모 절차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이 와중에 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학교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방과후강사들은 고용불안에 내몰리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직원들은 영상 교육 연출·제작, 쿠폰터, 방역 전문가 구실을 한꺼번에 소화하느라 큰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관련 기사: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본지 338호). 동시

에 방과후강사들은 일이 없어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그 간격을 메우는 방법은 방과후강사 등 코로나로 사실상 실직 상태인 노동자들 일부를 '임시직', '봉사직' 등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데려다 쓰는 것이다. 긴급돌봄, 원격학습, 방역 지원 업무에 방과후강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퍼센트가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중 약 40퍼센트가 '임금(시급)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소득 감소를 만회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다. 8.2퍼센트는 '학교에서 종종 무시 또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그조차 단기 임시직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기업 지원과 경기 부양에 594조 원을 쏟아부었다. 8월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비에 30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돈을 교육과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써야 한다.

정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방과후강사들의 생계소득과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때문에 사용자 측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동안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인하) 등을 요구해 왔다. 배달업 특수를 일궈 온 노동자들은 이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협약은 이런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 보상, 안전 등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항목의 내용은 핵심 알맹이가 빠져 있거나 "노력한다"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총알 배달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 경쟁 유발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라이더 배달료 인상, 근무조건의 잦은 변동 금지, 배달시간 제한과 평점 시스템 폐지, 안정적 고용 보장

등이 필요하다.)

협약서는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고용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계약 관계"로 명명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하는 주체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것이지,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은 그간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하다.

플랫폼 포럼 출범식 때부터 기업 측 위원은 "디지털이 결합된 플랫폼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며 노동자성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가 노동자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는 말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반영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출퇴근, 근태, 업무 성과와 평가, 노동강도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에게 업무를 '강제 배치'하고 이를 거부하면 다음 번 업무를 늦게 주는 등 불이익도 벌여진다.

2019년 10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요기요 플러스에서 일하던 배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사용자 책임

협약서가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관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번 협약서에는 기업이 "산재보험 가입 독려", "종합보험 안내" 등을 노력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산재보험이나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종사자는 사회안전망 보장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 의무 이행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항목도 사용자 측의 책임을 흐린다.

여러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배달 노동자들도 전속성(노동자가 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 기준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사측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사측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배달 노동자 비율이 38퍼센트나 됐지만, 배달 플랫폼 노동자 중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퍼센트에 불과하다(한국노동연구원).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은 이륜

차의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우 높은 보험료 기준을 뒤 사실상 가입을 막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배달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라도 나면 어마어마한 이륜차 수리비를 개인이 떠맡아야 한다.

가입하려면 거의 700만~8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이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인해 생기는 피해들이다.

플랫폼 포럼은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후속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6개월간 논의 속에서 나온 협약서가 핵심 알맹이가 없다는 건, 그만큼 노사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건 향상과 노동자로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양효영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정진희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촛촛히 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낙태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켰다고 하지만, 둘의 '조화'는 불가능하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권리'를 운운하며 실제로는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의사의 낙태 거부권 조항이 포함된 것도 문제다. 물론 낙태에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은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사 의사가 자신의 신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여성이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법안은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면 다른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소개시켜 준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 낙태 역제가 목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거부로 여성은 상담기관을 전전하다가 낙태가 지연되기 십상이고 기간 제한에 걸려 처벌받을 위험이 커진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낙태반대론자들이 의사 거부권 조항을 적극 이용해 합법 낙태를 더 축소시키려고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 의사의 거부권이 포함된 곳들이 많은데,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낙태권을 공격해 왔다.

보수파가 가하는 더한층의 후퇴 압력

한편, 정부안을 더 후퇴시키려는 시도들도 있다. 낙태반대론자들은 정부안이 낙태 전면 합법화 방안이라고 터무니없게 과장하면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사들은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제한 없는 낙태 허용은 임신 10주 미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낙태의 위험성을 과장하며, 임신한 여성이 아니라 의사들이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끔 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국가나 의사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부담과 삶의 변화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의사가 "무분별한 낙태"를 가려내겠다는 발상은 독단적이기 짝이 없고 여성차별적이다.

현재 결정의 한계

많은 진보적 여성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을 옹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안이 "현재 결정 위배"라거나 현재 결정보다 큰 후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 이런 입장은 현재 결정의 진보적 측면만 보는 반면 현재 결정의 한계를 간과한다.

낙태죄 조항들에 대한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일반적 수준에서 인정했다. 물론 이것은 10년 사이에 낙태죄 폐지 여론이 성장해 온 것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싸운 여성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 신문이 현재 판결 직후 밝혔듯이(283호의 기사,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현재 결정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현재 결정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부정확했(하)다. 현재 결정문은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을 명시했다.

이 점은 현재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이 몇몇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기에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현

재 결정문은 '태아 생명권 보장'(낙태 금지론자들의 핵심 이데올로기)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주장하며 기간이나 사유에 따른 낙태 제한 방안을 지지했다.

따라서 현재 결정의 진보성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파 정당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당시에 현재 결정을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수용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결정의 명백한 한계를 보아넘기는 것은 보수적 국가기관인 현재에 대한 착각을 심어 주며 대중에게 수동성을 부추길 수 있다. 이것은 낙태권 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차원의 조정 가능성?

정부가 낙태죄 유지 방침을 드러내자 본지를 비롯한 많은 진보·좌파 언론이 정부 개정안을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부안에 반대해 10월 12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기간과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5인과 정의당 의원 4인(심상정,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의원 1인(용혜인)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이 법안과 별개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주에 <한겨레>는 민주당 권인숙과 박주민 의원의 낙태죄 폐지 입장을 보도하며 이렇게 밝혔다. "여당 내부와 의원들의 반대가 속출하면서 국회 차원의 조정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대 의견 그룹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의 남인순 의원조차 권인숙 의원의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권인숙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한겨레>의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에 배신감을 느낀 개혁주의 시민단체들에게 또다시 민주당의 개혁과 의원들에게 헛된 기대를 걸도록 부추길 수 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없애리라는 기대 자체가 무망한 것이었다(2017년 11월 15일치 본지 229호에 실린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보시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낙태죄 폐지 염원에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2017년 11월, 23만 명이 참가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 국민청원에 정부는 알맹이 없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안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공을 떠넘겼다.

그러다 몇 달 뒤부터는 낙태죄 유지 속셈을 드러냈다. 2018년 5월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 때 법무부는 낙태죄 합헌 의견서를 냈다. 그리고 낙태하려는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려 했다. 법원 판결 없이도 불법 낙태를 도운 의사에게 자격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반발하고 특히 많은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계획은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보여 주듯,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권 보장은 지배계급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 이들도 '저출산 문제'로 노동인력과 병사의 부족을 크게 우려하며 결국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특히, 경제 침체로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조건 공격을 지지하면서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여성차별을 부추기고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는 것에 동참한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이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중 투쟁을 통해 지배계급을 크게 압박해야 실질적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2018년 국민투표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끈 대중적인 낙태권 투쟁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난 덕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가 언제든지 우파나 지배계급 전체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낙태 합법화가 이뤄진 나라들에서도 낙태권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낙태권 공격이 매우 거

세져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 위험이 있다(미국 연방대법관 킴버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노동자 연대> 337호 참조).

대중 투쟁은 지배계급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 낼 가장 확실한 동력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의식도 성장한다. 이것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우파들의 공격에 맞설 때도 중요한 힘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우파의 더한층의 후퇴 압력 모두에 맞서며 여성의 낙태권을 일관되게 옹호해 나아가자.